노동자 연대

Workers' Solidarity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wspaper.org

제280호 | 2019년 3월 27일 ~ 4월 3일 | 값 1,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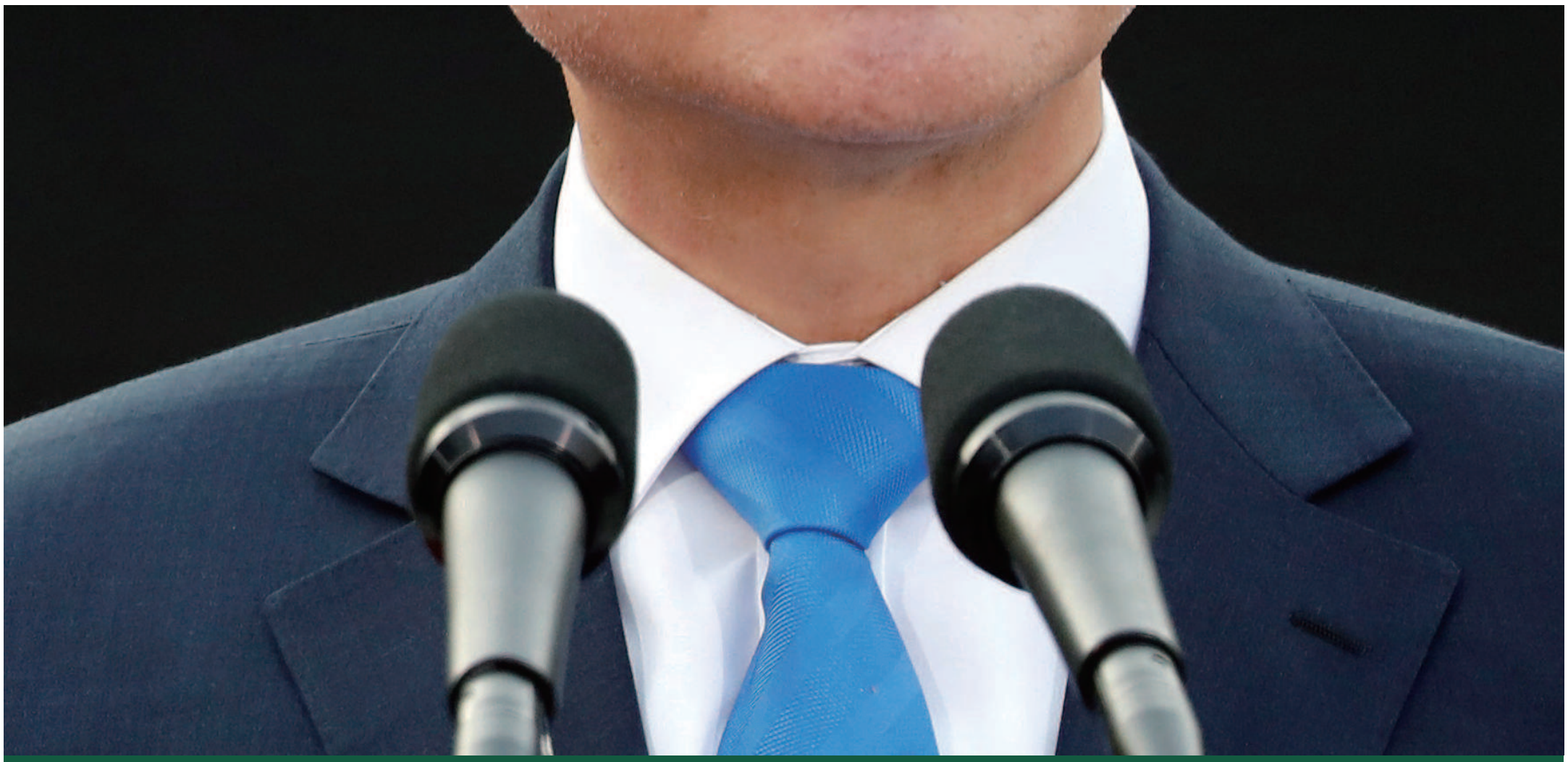
ISSN 2005-8217

발행인 : 김인식 편집인 : 김인식 사업자 명칭 :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 노동자 연대 발행 연월일(창간호) :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 (주)아이피디 이병동 등록번호 : 서울다08179 〈주간〉
등록연월일 : 2009년 1월 12일 주소 :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전화 : 02-777-2792 팩스 : 02-6499-2791
제보 : 02-777-2791 E-Mail : ws@wspaper.org

노동개악

문재인을 반대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적이다



국회 통과 임박한 노동개악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삭감 3면

박흥수 철도노조 철도정책연구팀장 인터뷰 "수서고속철도(SR) 분리 고착화는 박근혜 민영화 정책이 계속되는 것" 8면

대우조선 매각 반대 투쟁 4면

공공부문 파견용역에 맞선 투쟁 –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 인천 남동구 다문화가정 지도사 6면

창원 성산구 보궐선거 정의당·민중당 후보 지지 놓고 반목하지 말아야 한다 2면

버닝썬 게이트 경찰 부패와 검찰의 비호, 그 속에서 방조되는 성폭력 7면

권력층은 어떻게 '장자연'들을 입막음해 왔나 2면

전임 정부처럼 열의 없는 현 정부의 수사

권력층은 어떻게 '장자연'들을 입막음해 왔나

이현주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 차관 김학의 부패·성범죄 의혹에도 지금껏 처벌받지 않았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박근혜 정부의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를 권고했다. 자유한국당 의원 곽상도(박근혜 청와대의 민정수석)와 이중희(박근혜 청와대의 민정비서관이자 현 김앤장 변호사)의 경찰 수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권고했다. 그러나 특수강간 혐의는 재수사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학의 사건은 2013년에 우연히 드러난 건설업자 윤중천의 성상납 의혹에서 시작됐으나 권력 기관과의 유착 · 비호 의혹을 남기며 무마됐던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이 최근 박근혜 정부 청산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김학의는 '김학의 동영상'과 그에 대한 피해 여성들의 증언(당시 수사한 경찰에 따르면 영상은 2006년에 촬영된 것이고, 성적 피해는 2007~2008년에 일어났다)에 기초해 2013년, 2014년 성상납을 통한 뇌물혐의와 특수강간 혐의로 수사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두 차례 모두 석연치 않게 불기소 처분했다.

그런데 최근 김학의의 더러운 범죄를 덮으려고 박근혜 정부가 나선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하나는, 김학의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기 직전에 그가 받은 성상납 의혹을 내사하던 경찰을 박근혜 정부가 탐탁치 않게 여겨 질책했다는 것이다. 직후 경찰청 수사 지휘 라인도 전면 교체됐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들은 좌천됐고, 수사 지휘자는 당시 법무부 장관 황교안 · 청와대 민정수석 곽상도의 성균관대 동문으로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나는 박근혜가 김학의의 성추문을 알고도 차관 임명을 강행했다는 의혹이다. 물론 당시에도 박근혜가 김학의 아버지와 박정희의 관계를 생각해 임명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김학의 아버지는 박정희 시절 육군 대령으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 무공훈장을 받았던 인물로 박정희와 가까운 사이였다고 한다.

수사기관의 특권층 범죄 비호는 '장자연 자살 사건'에서도 고스란히 반복된 일이다. 재벌 회장, 조선일보사 사주 일가 등의 명단이 오르내린 이 사건의 진실도 10년 동안 부패한 권력에 의해 입막음당했다. 문재인 정부도 애초 재조사 대상에서 뺐었고, 조선일보사 등을 은근슬쩍 압박하는 데만 이 사건을 이용했을 뿐, 정식으로 재수사하지는 않았다.

결국 장자연 씨가 죽음으로 항변했는데도,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었다!" 언론계, 금융계 등 주요 고위층 인사들은 처벌도 받지 않고 뻔뻔하게 특권을 지키고 있다. 장자연의 동료 윤지오 씨가 "14번째 증언"에 나선 이유다.

유착

박근혜 정부 시절 사건이 다시 파헤쳐지며 자신들의 목을 조여 오자 한국당은 "표적 수사", "정치 보복"이라며 게거품을 물고 있다. 뇌물수수와 성범죄의 진실을 밝히자는 걸 자기들을 궁지로 모는 거라고 비난하는 꼴이야말로 이런 범죄가 그들 사이에선 흔하디 흔한 일임을 실토하는 셈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편의점에서 라면 한 봉지를 훔쳐도 기소되는 마당에 '돈 있고 빽 있는' 권력자들은 무서울 것 없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면한다.

경호원을 대동하고 변장한 채 해외로 내빼다 딱 걸린 김학의의 행태는 또 한 번 공분을 자아냈다.

그런데 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의 특수강간 혐의는 재수사 권고에서 뺐다. 고위 관료층과 기업인들의 거래에 여성들이 대상으로 동원됐고 끔찍한 성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증언이 있는데, 묻히는 건 말도 안 된다. 권력층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져야 한다.

최근 김학의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가 다시 불거진 맥락을 볼 필요가 있다. 지배계급의 내분이 한몫했다. 급속한 우경화와 배신으로 지지율이 하락한 문재인 측과 덕분에 반사이익을 얻어 회생 기회를 엿보는 한국당 측이 서로 비리를 폭로하고 있다. 물론 아직은 검 · 경을 손에 쥔 현 정부가 유리한 듯하지만 말이다.

수사지휘권 갈등을 벌이는 검찰과 경찰 간의 암투도 벌어진다. 검찰이 덮은 김학의 사건에서, 청와대 외압과 검찰 부실 수사 의혹을 뒷받침할 증언들이 경찰 쪽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유착'으로 말할 것 같으면 경찰도 만만치 않다는 게 버닝썬 사건에서 드러나고 있다. 또한 윤중천 별장에 전직 경찰청장도 드나들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검 · 경 갈등은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에게는 위험 신호다.

지배자들의 갈등이 가속화된 맥락에는 특권층 범죄에 대한 대중적 분노도 있었다("적폐 청산"). 급해서 (의혹을) 꺼내 놨지만, 오히려 대중의 감정을 자극해 일이 커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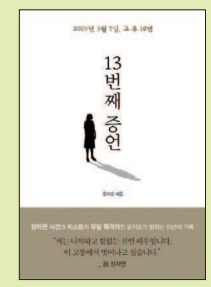
그러나 이 사건들의 처리 문제가 지배자들 사이의 은밀한 거래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서로 덮는 방식으로 말이다. 김학의, 곽상도, 이중희 모두 검찰 요직 출신들이라서 검찰을 믿기도 어렵다.

그래서 대중이 관심이 다른 곳으로 가길 바라며 수사를 질질 끌 수 있다. 이 정권이 지지율 위기 때마다 이명박 구속, 기무사 쿠데타 모의 문건, 세월호 공작, 장자연 리스트 등을 꺼냈지만 제대로 처벌된 건 거의 없다.

김학의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가 이 사회 최상층에서 군림해 온 자들의 추악한 면모를 드러냈다. 그들은 끼리끼리 뭉치고 유착해 특권을 주고받아 왔다. 또한 성이 상납 대상이 된 것은 여성이 이 사회에서 대상화돼 천대받는 존재임도 드러냈다. 검 · 경이 조직적으로 축소 · 은폐한 것은 이 권력기관들의 본질적 임무가 지배자들의 권력과 자산을 지키는 것인 데서 비롯한다.

진상이 낱낱이 밝혀져 관련 인물들이 엄벌되길 바란다. 이에 공감하는 이들은 범죄자들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혜택을 주고 또 감싸주는 자본주의 질서도 증오해야 한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윤지오 씨가 밝히는 10년의 기록



새로 나온 책 **13번째 증언**

윤지오 저 | 가연 | 2019년 03월 05일

윤지오 씨는 고(故) 장자연의 사망 10주기인 지난 3월 7일에 맞춰 이 책을 냈다. 윤지오 씨는 장자연을 죽음으로 내몬 권력층과 검찰과 경찰을 낱낱이 고발한다.

※ 서평은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4·3 창원 성산구 보궐선거

정의당·민중당 후보 지지 놓고 반목하지 말아야 한다

김인식

4월 3일(수) 창원 성산구에서 보궐선거가 있다. 같은 날 고성 · 통영에서도 선거가 있지만, 노동자들의 정치적 이목이 쏠리는 곳은 단연 창원 성산구이다.

자유한국당(이하 자한당) 대표 황교안은 이 선거가 첫 시험대다. 정의당의 지역구를 탈환하면 우파의 간판 정치인으로 발돋움할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반대로, 이기지 못하면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황교안은 창원 성산 선거에 사활적이다.

민주당은 창원 성산 선거에서 자한당을 저지할 능력도, 수단도 없다. 노동자 밀집 지구인 창원에서 민주당의 지지세가 허약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일찌감치 선거 결과에 애써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 했다. 민주당 대표 이해찬은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이후 창원을 찾은 적이 없다. 그러나 이솝 우화의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처럼, 못 따먹는 것을 안 따먹는 것이라고 스스로 위안 삼는 자기기만일 뿐이다.

창원 성산에서 자한당에 맞서 싸울 의미 있는 세력은 진보 정당들이다. 그래서 진보의 선거 승리를 위해 정의당 · 민중당이 후보를 단일화하라는 요청이 강했다. 그러나 두 정당의 후보 단일화 협상은 결렬됐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감정적 앙금까지 더해 두 정당의 선거 경쟁이 격해진 탓이다.

"좌파 야합"?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이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를 합의했다. 여론조사 결과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정의당-민주당의 단일 후보가 됐다.

황교안은 "좌파 야합"이라고 맹비난했다. 후보 지지율 판세가 뒤집힐지 모른다는 황교안의 다급함이 느껴진다. 그러나 민주당은 결코 좌파가 아니다. 좌파는 고사하고 진보 정당도 아니다. 최저임금 · 탄력근로제 등 노동 개악과 대우조선 민영화(매각)을 추진하는 노골적인 자본주의 정당일 뿐이다.

〈한겨레〉가 정의당-민주당의 후보 단일화를 "범진보 단일화"라고 한 것은 그래서 잘못됐다. 〈한겨레〉는 민중당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

〈노동자 연대〉는 정의당이 노골적인 자본주의 정당인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를 하는 것을 반대했었다. 그리 되면 정의당이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개혁의 진정한 동력인 노동자 운동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민주당 후보가 정의당-민주당 단일 후보가 되는 최악의 상황은 어찌어찌 면했지만, 엉킨 실타래가 풀린 것은 전혀 아니다.

진보 후보가 둘인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두 정당이 후보 단일화 실패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두 정당 후보들의 2차 단일화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 상태로 투표일까지 가면 노동자 유권자들은 누구에 투표해야 할지 곤혹스러울 것 같다.

적잖은 노동자들은 2012년 총선 때처럼 진보 후보들이 분열해 자한당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되지나 않을까 걱정할 것이다. 그래서 '될 사람 밀어주자'는 심정으로 여론 조사에서 앞서는 진보 후보에 표를 몰아 주려는 분위기가 생겨날 수도 있다. 선거 막바지로 갈수록 이런 생각을 하는 노동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럼에도 선진 노동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당선 가능성만을 우선적 투표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두 후보의 정치적 배경과 지지 기반의 상대적 진보성을 찾아 봐야 한다. 이 점에서 더 나은 후보가, 설령 당선하지 못해도, 선전(善戰)하는 것이 노동자 투쟁에 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두 후보의 정치적 배경은 비슷하다. 둘 다 1980년대 후반 마산 · 창원 지역에서 전투적 노동조합 운동을 하다가 1990년대 후반에 진보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그 뒤 두 후보의 진보 정당 활동을 봐도 일관된 좌우 차별성이 나타나지 않는 듯하다.

두 후보가 모두 이 지역에서 만만찮은 노동자 기반을 갖고 있다. 그리고 어느 한 후보의 지지자들이 상대 후보 지지자들보다 더 전투적인(또는 더 온건한) 것 같지도 않다.

이 모든 점을 종합해 볼 때, 두 후보 중 반드시 어느 한쪽에 투표하라고 할 수 없는 듯하다. 두 후보 중 한쪽에 투표하되 지지자들이 편가르기 식으로 대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두 정당이 선거 경쟁을 격화하면서 노동자들 사이에서 갈등과 반목을 키워서는 안 된다. 선거보다 비할 데 없이 더 중요한 것은 투쟁 속의 단결이기 때문이다.

국회 통과 임박한 노동개악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개악 중단하라

강동훈

문재인은 3월 25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개악 등 노동개악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사정이 긴 산고 끝에 양보와 타협으로 합의한 매우 뜻 깊은 사례"라며, "국민생활과 국가경제가 시급히 필요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말이다.

그러나 탄력근로제 개악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본회의에서 합의되지 못했다. 청년 · 여성 · 비정규직 대표 3인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에 반발해서 경사노위 본회의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양보와 타협" 운운하며 국회 통과를 강행하고 있다. 그동안 내세워 온 "노동존중"은 쓰레기통에 처넣은 것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를 사용주들이 최대한 이용하면 1년(52주) 중에 연속 40주 동안 매주 64시간 노동을 시키는 것도 가능해진다. 사실상 "과로사 합법화" 정책인 것이다. 또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없어 임금도 줄게 되는 임금 삭감 정책이다. 문재인은 최저임금법 개악도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는데, 이런 게 "국민생활"에 시급히 필요한 법이란 말인가?

정부와 보수 언론들은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과 '임금 보전 방안' 등 보완책이 마련돼 있다고 미화하고 있다.

그러나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으로 과로를 막을 수 없다.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더라도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이 허용되는 것일 뿐 아니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이조차 무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탄력근로제의 세부 사안들도 모두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시행하기로 돼 있으나, 중소영세기업 · 비정규직 노동자들처럼 노조로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은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 물론 조직 노동자들이라고 예외인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조직 노동자들을 '귀족노조'라고 비난하며 '취약 계층을 위한다'던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열악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의 조건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빌미로 노동조합법도 개악하려 한다.

3월 20일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은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ILO 핵심협약 국내 비준과 '사용자 방어권' 강화를 동시에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연히 보장해야 할 노동기본권을 거래 대상으로 삼으면서,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제도 폐지 등처럼 그동안 사용자들이 요구해 온 단체행동권 개악을 함께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내놓은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도 문제투성이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내놓은 노조법 개정안은 '종사자'와 '종사자가 아닌 조합원'이란 개념을 도입해, 해고자 · 실업자나 사내하청 · 파견 노동자, 상급단체 · 산별노조 간부처럼 해당 사업장 직원이 아닌 조합원의 작업장 내 노조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단체행동권을 억제하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것이다.

단체행동권

물론 한국당과 민주당이 서로 서로 부패를 폭로하며 다투고 있는데다 선거법 개정을 둘러싸고 갈등하고 있다.

경사노위에서 '사용자 대항권' 합의안도 나오기는 쉽지 않다. 공익위원들이 부당노동행위 제도 폐지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 빼려고 하자, 사용자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사노위의 다음 본회의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부터 신속하게 친자본 · 반노동 본색을 드러내며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는 것은 경제 위기로 다급해진 기업주들에 잘 보여 국정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한국당도 민주당보다 한술 더 뜬 개악안들을 내놓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사용자들이 청탁한 노동개악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서는 한통속이기 때문에 합의안은 쉽게 나올 수 있다.

환노위의 한 관계자는 "지도부가 합의한다면 이틀이 아니라 하루 만에도 타결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조법 개악도 경사노위에서 개악안이 합의가 되든 되지 않든 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게다가 정부와 사용자들로서는 노동개악을 마냥 미룰 수는 없는 상황들도 있다. 정부가 주 52시간제 단속 유예를 3월까지로 약속한데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추려면 가능한 빨리 최저임금 제도 개악을 해야 한다. 한-EU FTA에 따른 EU 측의 제재를 피하려면 4월 9일까지 ILO 협약 비준에 관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서는 개악 법안들이 통과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치열한 정쟁의 와중에서도 한국당이 조건 없이 3월 임시국회 개원에 합의해 준 것을 떠올려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총력으로 저항해 노동개악에 맞서는 것이다. 국회 본회의 일정에 맞춰 하루 총력투쟁을 하는 것으로는 개악에 제동을 걸기 부족하다.

민주노총은 3월 27일 하루 총력투쟁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개악 저지 파업을 해야 한다.

사진 조승진

총력 저항이 필요하다 3월 22일 '노동개악 저지! 공공운수노조 총력 결의대회'

사진 조승진

문재인 정부는 ILO 비준을 빌미로 '사용자 대항권'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노사정위와 다를 바 없는 경사노위의 본질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을 끌어들이려고 법안을 전부 개정해 사회적 대화기구를 개편했다.

노사정위가 정부 정책에 대한 '합의'를 압박하는 수단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이다. 그래서 노동위원 5인 중 절반 이상이 참가하지 않으면 경사노위 본회의 통과를 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다.

그러나 이번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 과정에서 보듯, 이런 조처도 아무 쓸모가 없었다. 비정규직, 여성, 청년 계층별 노동위원 3인이 경사노위 본회의에 불참해 탄력근로제 개악안은 경사노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는 '합의'는 이미 된 것이라며 국회에 개악안을 넘겼다.

적반하장 격으로,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매너가 없다"며 계층별 노동위원 3인을 비난하고, 의사결정구조를 바꾸겠다고 협박했다.

지난해에 주 52시간 노동시간 제한이 결정됐을 때부터 정부와 사용자들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고, 정부는 올해 3월 중으로 이를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리고 경사노위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국회에 넘겨 밀어붙이고 있다.

결국, 경사노위는 이전의 노사정위와 마찬가지로, 시기를 정해 놓고 합의를 압박하면서 정부 정책의 추진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노동자 전반에 대한 임금 삭감 공격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부터 경제 상황이 악화하자 노동자 전반의 임금을 삭감하려고 한다.

탄력근로제 개악은 노동유연화 정책일 뿐 아니라 임금 삭감 정책이기도 하다. 1년에 절반은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연장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또다시 '정규직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3월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는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 공공부문 정규직 노조가 3년 내지 5년간 임금인상을 자제"하라고 요구했다.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결해야 한다며 말이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해결'하려는 게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건 확실하다.

최저임금은 개악에 재개악까지 추진하고 있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도 처우 개선 없는 무기계약직화, 자회사 등 누더기로 만들었다. 심지어 민간위탁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아예 손을 놓아 버렸다.

결국 정부는 대기업 · 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자들뿐 아니라 저임금 · 미조직 노동자들의 임금까지 삭감하는 친기업 · 반노동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대우조선 매각 중단하라

김지태

대우조선 본계약이 체결됐지만, 사태가 끝난 것이 결코 아니다.

절차상으로 봐도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경쟁국가들의 독과점 심사가 남아 있다. 인수합병에 따른 현대중공업 구조 개편(조선통합법인과 사업법인으로의 물적 분할)을 위해서는 5월 말경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의결 절차도 거쳐야 한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저항이 지속되고 있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매각을 밀어붙이는 정부와 해당 부처(산업은행, 공정거래위원회)를 규탄하는 한편, 민주당 경남도와 거제시 등에 매각 반대 입장을 채택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3월 20일에는 대우조선 노동자 수천 명이 퇴근길에 공장을 둘러싸고 촛불 시위를 했고, 이틀 뒤에는 700여 명이 서울로 상경해 "문재인 정부는 매각 중단하라"며 청와대로 행진했다.

노동자들은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간접지원 업무를 모조리 분사[화]해서 비정규직 일자리로 만들었습니다. 대우조선에서는 간접지원 업무를 아직 정규직들이 맡고 있기 때문에, 인수합병되면 이것부터 분사될 거라는 걱정이 많습니다."

"대우조선에서도 현대중공업처럼 대규모 휴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김미진 사진

3월 22일 대우조선 매각 저지 청와대 상경 투쟁 투쟁에 유리한 상황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지난 구조조정 속에서 대량 해고되고 임금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인수합병은 또다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조건을 공격할 것입니다."

이런 불만을 의식해 산업은행이 '인력 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지만 그 약속은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문재인이 직접 나서 "고용의 불안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지만, 노동자들은 "그러면 매각을 말아라!" 하고 대응했다.

정치 쟁점화

그도 그럴 것이, 정부는 이미 지난해 4월 발표한 '조선산업 발전전략'에서 조선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과잉 설비 · 인력을 줄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해 대우조선 매각과 인수합병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걱정은 결코 기우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불황이 장기화되자 자신의 공약을 어기며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여러 공약도 후퇴했다. 광주형 일자리 같은 저질 일자리를 확대하고 기존 노동자들의 조건을 낮추려고 한다. 대우조선 매각(민영화)도 그런 시도의 일부다.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한 정부가 사실상 국가 소유 기업을 민영화해 일자리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대우조선 매각은 단지 그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자들이 국가의 책임을 물으며 대우조선 민영화를 정치 쟁점화해 싸운다면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얼마 전 한 토론회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 · 좌파 단체들이 '대우조선해양 매각 철회 전국대책위(가)'를 출범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를 받아 안아 첫 회의를 제안한 상태다.

대우조선 노동자들은 위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대우조선을 20년 가까이 운영한 국가야말로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가 대우조선을 민간에 내다 팔지 말고, 영구적으로 공기업화 해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십수년간 피땀흘려 일해 온 노동자들은 그것을 누릴 자격이 충분하고, 단호하게 싸워 정부를 강제할 잠재력이 있다. 수주가 회복되면서 파업 효과가 커지는 상황,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상황, 4월 재보궐 선거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분열하는 상황 등을 이용해 정부를 압박하고 연대를 확대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개악

문재인의 후퇴로 더 자신 있게 공격하는 우파

3월 25일 문재인은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개악을 국회가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월 말 개악 통과가 안 되더라도, 여야는 4월 3일 환노위 전체회의와 4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악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3월 내 최저임금법 개악이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자, 일부 언론에서는 고용노동부가 현행 절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개시하려 한다는 보도가 흘러나온다. 그러나 이는 조속한 개악 통과를 요구하는 압박용일 공산이 크다. 고용노동부는 4월 초에라도 개악안이 통과되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절차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개악안 처리가 4월로 넘어간 것은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우파정당들이 정부와 여당의 개악안보다 더한 개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은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악뿐 아니라 주휴수당을 노사합의로 제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파 정당들은 탄력근로제와 관련해서는 단위기간을 6개월이 아닌 1년으로 확대하거나(자유한국당),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것(바른미래당)을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도 결정기준에 '기업지불능력'을 포함하고, 업종, 규모, 지역 등에 따라 차등적용 하는 식으로 추가 개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파들의 자신감은 정부와 여당의 거듭된 후퇴와 말 바꾸기에서 비롯됐다. 최근에도 고용노동부는 국회에 제출한 '최저임금 영향조사 중간보고'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이 약속한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러면서 최저임금을 탓하는 보고서를 내놓은 것은 사실상 우파들의 주장에 동조한 셈이다.

정부와 여당이 우파들과 한편이 돼 더한 개악도 합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설사 4월 초에 최저임금 개악을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해도 개악은 계속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형편없이 낮추는 식으로 말이다.

따라서 우파와 정부 여당 모두를 겨냥해 투쟁을 지속해야 한다.

장우성

우체국위탁택배 노동자 투쟁

노동자에게 적자 책임 떠넘기지 말라

3월 25일 청와대 앞에서 전국의 우체국 위탁택배 노동자 700여 명이 모여 우정사업본부 규탄대회를 열었다. 노동자들은 "적자경영 책임전가하지 말라", "단협파기, 노조파괴 중단하라" 하고 외쳤다.

우체국 위탁택배 노동자들은 우정사업본부의 자회사 격인 우체국물류지원단과 2년마다 계약을 맺는 특수고용 노동자들로 전국적으로 2000여 명에 이른다.

노동자들은 우체국위탁택배협회를 결성하고 활동해 오다, 2018년 4월 택배연대노조에 가입했다. 협회 시절 400여 명 수준에서 현재는 조합원 1200명으로 대폭 늘었다.

지난해 말에 임금 ·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노동자들은 투쟁을 준비했다. 조합원 99.5퍼센트가 참여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시켰다.

결국 파업 직전에 우체국물류지원단은 노동조합 활동 보장, 위탁택배 노동자 차별 철폐, 휴일 · 휴가 보장,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합의했다. 특히 물량 분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혼합파렛트')를 해결하고, 조합원과 협의 없이 택배구역을 조정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단협을 체결한 지 2개월도 되지 않아 약속은 파기되고 있다.

우선, 물량 분류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위탁택배 노동자들도 민간 택배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루 2~3시간에 이르는 분류 작업을 '공짜 노동'으로 강요받고 있다. 이 때문에 하루 12시간에서 15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노동을 한다.

단협 체결 당시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2월 말 우정사업본부가 비정규직 노동자 300명을 집단해고 하면서, 오히려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공짜 노동

또한, 일방적으로 배송구역을 조정하고, 오는 7월부터는 초소형 택배 물량을 위탁택배원이 아닌 집배원들이 배송하도록 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건당 수수료 형태로 임금을 받는 위탁택배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고, 소형택배를 넘겨받는 집배원 노동자의 노동강도는 강화되는 것이다. 집회장에서 만난 한 위탁택배 노동자는 "임금이 30퍼센트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사업 적자를 이유로 이런 공격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우편사업은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적자액이 1285억 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업무 외에 금융과 보험 부문에서 매년 수천억 원의 흑자를 내고 있다.

이 흑자를 이용하면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며 양질의 우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월 25일 집회에서는 우정사업본부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연 것도 이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을 약속해 놓고, 실천에서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거듭 제기됐다.

우정사업본부는 그동안 택배 서비스를 떠받쳐 온 위탁택배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도 앞에서는 특수고용직인 위탁택배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을 허용해 놓고, 뒤로는 노동조건에 공격을 주문하는 위선적인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장우성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청문회 시작

제주 영리병원, 문재인에게도 책임 있다

장호종

3월 26일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회가 열린다. 제주도 측이 애초 밝힌 바대로라면 4월 초에는 허가 취소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

녹지국제병원은 개원 허가를 받은 뒤 3개월이 넘도록 문을 열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의 해외 투자 규제에 사드 배치로 인한 한 · 중 갈등, 미 · 중 무역 갈등 등이 큰 영향을 준 듯하다. 여기에 한국 병원의 우회 투자 의혹이 계속 제기되자(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여겼을 것이다.

제주도지사 원희룡은 공론조사 결과까지 무시하며 개원을 밀어부쳤지만, 제주도 여론과 영리병원 반대 운동의 압력 때문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내세웠다. 녹지국제병원으로서는 사업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인이 하나 더 생긴 것이다.

결국 녹지국제병원은 개원 허가 기한 만료일이 지나도록 진료를 시작하지 않았고, 원희룡은 의료법에 따라 3월 4일 허가 취소 절차를 시작해야 했다. 만약 취소 결정이 난다면 이는 제주 영리병원 반대 운동 측이 거둔 또 하나의 승리로 기록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

먼저 원희룡 측이 시간을 질질 끌 가능성이 있다. 3월 4일 취소 절차를 시작할 때 한 달 뒤에는 결과가 나올 거라던 제주도 측은 최근 말을 바꿨다. 청문 절차가 길어질 경우 4월 말에야 결정이 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사이에 녹지그룹이 허가 취소 절차를 중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다.

사진 출처 보건의료노조

정부의 의료 영리화가 계속되는 한 영리병원 설립 시도도 계속될 것이다

중앙정부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 정무부지사 안동우는 3월 4일 취소 절차를 시작하며 녹지그룹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사업 파트너인 만큼 양자 간에 헬스케어타운의 향후 사업 방안을 논의하기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시종일관 자기 소관이 아니라며 발을 빼고 있다. 허가 취소 결정이 나도 줄줄이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무엇보다 지난 16년 동안 역대 정부가 영리병원을 추진해 온 동기가 사라지지 않았다. 의료를 새로운 '산업'으로 키워 국가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게 그 목표다. 삼성 등 제약 · 의료기기 · 병원 · 민간의료보험 시장을 개척하려는 국내외 자본가들이 이를 요구해 왔다.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이후 저성장이 계속되자 이런 필요는 더욱 커졌다.

의료 민영화 반대 운동과 기층의 반감으로 이 정책들을 거듭 무산됐지만 역대 정부와 국내외 자본들은 이름만 바꿔가며 거듭 이 정책을 추진했다. 2002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도입 허가로 시작해 가장 최근의 싼얼병원과 녹지국제병원까지 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시도는 지칠 줄을 몰랐다.

16년

문재인 정부도 말로는 '의료 영리화에 반대한다'고 했지만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사실상 허가했다. 원희룡이 공개적으로 문재인 정부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을 때도, 공론조사 결과 제주도민의 압도 다수가 반대한다는 의견이 나왔을 때도, 원희룡이 이를 무시하고 개원 허가를 냈을 때도 침묵했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JDC가 사업의 한 주체인데도 이들이 계속 헬스케어타운 사업을 추진하도록 방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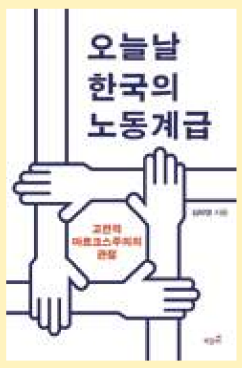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이후에는 사실상 전임 정부들이 추진하던 의료 영리화 정책을 고스란히 이어받아 추진했다. 대선 당시 문재인 자신이 '적폐'라고 부른 규제프리존법을 지난해 통과시키고 원격의료도 추진하고 있다. 3월 25일에는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함께 의료 영리화 3법(첨단재생의료법, 혁신의료기기법, 체외진단기기법)을 국회 소위에서 통과시켰다.

따라서 영리병원 반대 운동 진영은 긴장을 늦추지 말고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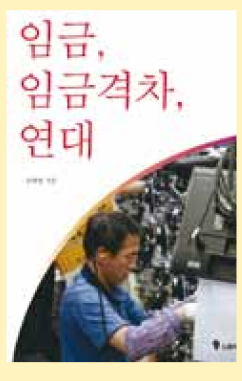
영리병원 설립 시도에 강력한 제동을 걸려면 문재인 정부의 의료 영리화에도 맞서야 한다. 영리병원 설립과 원격의료 등 다른 의료 영리화 정책은 실과 바늘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어느 쪽이 먼저 추진되든 다른 한 쪽을 필요로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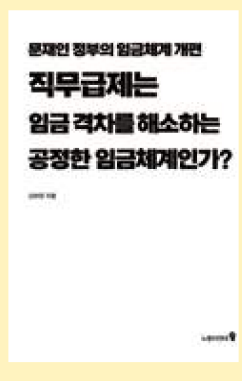
영리화의 피해자 중 하나인 병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과도 결합돼야 한다. 얼마 전 산재 승인을 받은 고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은 병원의 영리 추구가 노동자들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상징적으로 보여 준 사건이었다.

따라서 지금 국회에서 통과를 앞두고 있는 탄력근로제 등 노동 개악에 맞선 투쟁,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투쟁에도 병원 노동자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노동운동의 봄에 이 책을 봄





오늘날 한국의 노동계급
(김하영, 책갈피, 2017)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한국의 계급 구조와 노동계급의 조건 변화를 분석한 책. 오늘날 노동운동 내에 상식처럼 퍼져 있는 노동계급 약화론을 이론, 구체적인 실증 자료, 역사적 경험 등에 비춰 다각도로 논파한다.

노동조합 속의 사회주의자들
(알렉스 캘리니코스 등, 책갈피, 2018)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활동가 세 명의 글을 엮은 책. 노동조합(운동)의 모순적 성격, 노동조합 관료층과 현장 조합원의 관계 등을 다룬다. 영국 경험이 중심인데도 한국 노동운동 투사들이 교훈 삼을 내용이 놀랍게 많다.

임금, 임금격차, 연대
(김하영, 노동자연대, 2016)

임금격차 증대의 본질을 밝히고, '조직 노동자들이 잘 싸울수록 임금격차만 커진다' 하는 냉소를 정면으로 반박한다. 얇은 분량(130여 쪽)임에도 알차고 간단명료해서, 투쟁하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입소문 탄 소책자.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김하영, 노동자연대, 2019)

4차 산업혁명이 자본주의를 위기의 늪에서 꺼내 줄까? 인공지능 로봇들이 일자리를 빼앗고 노동계급을 약화시키진 않을까? 4차 산업혁명의 실체와 관련 논의들에 숨어 있는 정치적 의도를 들춰 낸다.

직무급제는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공정한 임금체계인가?
(김하영, 노동자연대, 2019)

문재인 정부의 직무급제 도입이 진정으로 노리는 바와 노동자들에게 미칠 악영향을 조목조목 파헤친다.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올바른 대안은 무엇이고 어떻게 가능한지 제시한다.

조선업 위기와 대우조선 매각(민영화) 일자리 보호를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박설 등, 노동자연대, 2019)

대우조선 민영화에 맞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대안(영구 국유화)을 제시하고, 경제 위기 하에서도 노동자들에게 싸울 힘이 있다고 주장한다. "바람직한 매각"론 등 노동운동 내 일각이 내놓는 대안의 난점도 짚는다.

2019년 기지개 펴는 노동운동 — 쟁점과 과제
(김하영·최일붕, 노동자연대, 2019)

한국의 노동운동이 10년간의 정체기를 끝내고 활력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잠재력을 제약할 약점도 적잖다.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인 두 저자가 2019년 노동운동과 세계 경제의 전망을 내다보고 좌파의 과제를 제시한다.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화 제로

정규직화 투쟁 재개하다

장호종

사진 출처 의료연대본부

2018년 9월 28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공공운수노조 총력 투쟁대회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손 놓고 있는 정규직화를 쟁취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화를 약속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에게 자회사를 강요하고 이것이 통하지 않자 정규직화를 아예 손 놓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현재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율이 0퍼센트라고 밝혔다. 두 노조가 파악한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규모만 해도 3000명이 넘는다. 민간위탁(장례식장, 식당, 콜센터 등)의 경우 개별 사용자들이 판단하도록 내맡겨 정규직화 논의가 시작될 조짐도 없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2018년 시작된 노사전문가 협의체 회의가 14차를 넘기도록 전혀 진척이 없다. 병원 측이 자회사 방안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부터 서울대병원 측 관리자들은 곧 병원장이 바뀔 것이라며 완전히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회사는 또 다른 용역일 뿐이라며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다.

2017~2018년 보건의료노조와 정부는 공공병원TF에서 국립대병원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합의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 소속 국립대병원에서도 파견용역직은 전혀 정규직화되지 않았다. 2018년에는 이 합의로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은 계약 만료 시점(대부분 2018년)에 직접고용 정규직화 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약속도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서울대병원 측이 자회사 방안을 고집하자 다른 국립대병원들도 보조를 맞추며 시간만 끌고 있다.

얼마 전 보건의료노조가 주최한 국회토론회에서 정재범 부산대병원 지부장은 부산대병원이 자회사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아무런 진전이 없다. 병원은 '다른 국립대병원, 특히 서울대병원의 전환과정을 지켜보고 우리도 결정하면 좋겠다'더니 컨설팅 용역입찰공고를 냈다. 자회사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파견용역직 정규직화 합의 당시 보건의료노조는 표준임금제 방안에 합의해 노동조합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정작 정부와 병원 측은 그 합의조차 온전히 지킬 생각이 없었음이 드러난 것이다.(이 점에서 표준임금제 합의로 '자회사 방안을 막아냈다'는 보건의료노조 집행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국립대병원 사용자들이 교육부 지침이 없다며 나 몰라라 하는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와 의료연대본부는 정부가 나서서 정규직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누더기가 된 1 · 2단계 공공부문 '정규직화'로 보나, 최근 가속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우경화 행보로 보나, 실제 정규직화 여부는 투쟁에 달려 있을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뿐 아니라 잘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 투쟁이 절실하다. 정부의 지회사 방침에 맞서 정규직화를 쟁취하려면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차원의 연대 투쟁도 꼭 필요하다. 문재인에 대한 기층 노동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현재 상황은 이런 투쟁을 조직하기에 그리 나쁘지 않다.

의료연대본부는 3월 28일 서울지부 집회를 시작으로 4월 교육부 앞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파견용역직뿐 아니라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정규직화도 요구하고 있다. 5월에는 산하 국립대병원 비정규직의 공동 파업도 계획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도 집단 조정신청 등 투쟁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두 노조는 현재 공동 투쟁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교육부 담당자(정기연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 사무관)는 "현재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국립대병원은 모두 적자인 상태"라며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바람에 찬물을 끼얹으려 했다.

그러나 1년 넘도록 "희망 고문"을 당해온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요구는 완전히 정당하다. 이들의 노동 없이는 거대한 대학병원도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 무엇보다 국립대병원이 수익을 내야 한다는 논리는 노동자들뿐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피해를 준다. 한국에서 가장 큰 공공병원인 국립대병원들은 '착한 적자'를 내야 마땅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할 책임이 있다.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를 보내자.

인천 남동구 다문화방문지도사 노동자들

정규직화 외면하고 민간위탁 하려는 남동구청

문재인 정부는 민간위탁의 정규직 전환은 사실상 포기했으며 민간위탁을 유지하려 한다. 한술 더 떠, 정부는 올해 공공시설 민간투자를 확대하는 역주행에 나섰다. 정부의 '민간위탁 정책 추진 방향' 발표 이후 인천 남동구청(민주당 소속 이강호 구청장)은 직영으로 운영하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6월 1일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8년째 다문화방문지도사로 일하고 있는 민주일반연맹 일반노조 인천 남동구 다문화방문지도사지회 정수정 조합원을 인터뷰했다.

다문화방문지도사는 어떤 일을 하고, 노동조건은 어떤가요?

결혼 이주여성과 그의 자녀에게 한국어 교육, 부모교육, 아이들의 학습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이 있어요. 한국어 선생님들은 한국어교원자격증이 있고, 부모와 자녀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도 관련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전국의 방문지도사가 1079명이 있습니다. 현재 인천의 모든 구에 다문화센터가 있어요. 다문화 사업은 무엇보다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인천에선 [제가 일하는] 남동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민간위탁입니다.

매년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 근무 계약을 해 왔습니다. 올해부터 12개월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상시 · 지속 업무인데도 매년 기간제로 일해 온 거죠.

2017년까지는 시간당 1만 2500원을 받았습니다. 2018년과 올해 각각 [시급이] 몇백 원 인상되었습니다. 제가 올해로 8년차인데 호봉이나 근속수당 같은 것은 한 푼도 없고, 6년간 시급이 1만 2500원으로 동결됐습니다. [그래서 주 16시간 근무하는 방문지도사들은 월 급여가 80만 원밖에 안 된다.]

지난해 8월 노조 결성 및 활동으로 올해부터 처음으로 명절 수당(연 30만 원)과 매달 식사비(5만 원)를 받고 있습니다. 처우가 매우 열악하죠.

동지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인데 오히려 남동구는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려 한다고 들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다문화방문지도사 선생님들이 온라인 밴드를 만들게 됐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 각 센터마다 상황이 달랐는데 우리의 처우가 얼마나 열악한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인천 남동구에서 노조를 만들고 구청에 처우 개선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노조를 만들면서 저희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1단계 전환 대상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됐어요. 그때까지 구청이나 다문화센터 어느 곳에서도 이에 대해 알려 준 바가 없어요. 그래서 정규직 전환도 같이 요구했죠.

그런데 저희 방문지도사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한 선례가 없으므로 시켜 줄 수 없다는 거에요. 웃기죠.

최근에 남동구청은 저희가 10개월 계약직이어서 전환 예외 사유였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나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저희 방문지도사 일자리는 향후 2년 이상 지속되리라 예상되고, 상시 · 지속적인 업무이므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예시 직종으로도 나와 있어요.

심지어 여성가족부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처우개선비도 내려 왔었는데, 남동구청이 반납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2017년 7월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1단계 대상인 저희들을 당장 전환했어야 하는데도 속여 온 거죠.

올해 전국에서 최초로 창원에서 방문지도사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선례가 생겼으니 우리도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되겠구나' 싶었는데, 갑자기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거에요.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면 고용이 불안해지고 처우가 낮아지고, 그렇게 되면 서비스 질이 하락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문화 사업은 이주 여성들의 한국 사회 정착을 도와주는 것이고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클 수 있도록 하는 등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교육을 중점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따라서 이 사업은 효율성을 중요시 해서는 안 되고 공공성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돌리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여성가족부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거죠. 여성가족부가 '가이드라인 상 상시 · 지속 업무이므로 정규직으로 전환해라'라고 지침을 내려야죠.

문재인 정부가 '노동이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해서 뽑았어요. 그런데 약속과 달리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겉으로는 '노동 존중'을 얘기하면서 뒤로는 민주당 소속인 지자체장들 시켜서 직영을 위탁으로 바꾸면 안 된다고 봐요. 저희의 민간위탁 전환 사례가 다른 곳의 선례가 될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어요.

민간위탁 전환 반대 투쟁에 대해 얘기해 주세요.

3월 18일부터 구청 앞 아침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3월 20일엔 남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3월 25일부터 결혼 이주여성분들과 내근직 노동자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같이 약식 집회를 하고 있어요. 교육 대상자들도 직영으로 바뀌고 나서 좋아했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옛날[민간위탁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니까 이분들도 '우리는 싫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에요. 저희들도 깜짝 놀랐어요.

웹사이트에서 인터뷰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 정리 신정환

버닝썬 게이트 — 경찰 부패와 검찰의 비호, 그 속에서 방조되는 성폭력

김승주

고급 클럽 소유주와 검경 유착 속에서 여성들이 성범죄에 희생됐다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에는 클럽 소유주들이 마음껏 돈 벌 수 있게 온갖 비리를 뒤봐주고 뇌물을 받은 썩어빠진 경찰이 있었다. 클럽 내 온갖 범법 의혹들(성범죄, 마약 유통, 폭행 묵인, 탈세, 불법 건축 등)은 부패한 권력의 뒷배가 없었다면 가능치 않았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이 손님 접대상에 오르는 성적 물건으로 취급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집중 단속하겠다"지만, 새로운 사실이 폭로될 때마다 경찰 자신이 묵인 · 방조 · 증거 인멸 · 봐주기 등에 연루돼 있다는 게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이제 부패 고리가 국제 범죄조직인 삼합회로 연결돼 있다는 의혹까지 나왔다(〈SBS〉 '그것이 알고싶다').

경찰은 가수 정준영의 단체 카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사람으로 윤규근 총경을 지목해 조사 중이다. 윤 총경과 그의 아내는 버닝썬 전 대표와의 유착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검경 수사권 조정(분산) 문제로 경찰과 경쟁 중인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권한을 내놓으라고 한다. 그러나 김학의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등에서도 알 수 있듯 검찰의 고위층 유착과 부패도 만만찮다.

버닝썬 사건에서도 검찰은 결코 믿을 만한 제3자가 아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정준영이 불법 성관계 영상 관련 수사를 받았을 때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반려했고, 올해 2월 말에는 유착 의혹의 고리로 지목된 전직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애초에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얘기가 나온 것도 "떡검", "섹검" 등 검찰이 부정부패의 대명사가 돼 대중의 불신을 크게 샀기 때문이다.

검찰과 경찰이 재벌 등 대기업, 유흥업계, 유력 정치인과 유착해 범죄의 일부가 되는 일은 하도 흔하고 뿌리 깊어서 영화의 단골 소재가 돼 버렸다.

줄줄이 무혐의를 받은 김학의의 별장 성폭력 의혹 사건, 고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검경은 여성 차별이나 성범죄를 진정으로 뿌리 뽑을 의지와 능력이 없을뿐더러 오히려 그것을 재생산하는 구조의 일부다. 그들이 내세우는 "법과 원칙"은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들이 말하는 '사회 질서'는 노동계급이 착취와 억압을 꾹 참고 성실하게 일하도록 강제하고, 지배계급의 재산과 특권을 보호하기 위한 질서다. 검경은 보통 사람들의 소소한 비행과 달리 권력자들의 '통 큰' 범죄들은 눈감아 주기 일쑤면서, 기존 사회 질서에 항의하는 노동자 등 차별받는 사람들의 정당한 움직임은 폭력적으로 탄압한다. 부패와 불의는 자본주의의 붙박이장이다.

문재인은 25일 청와대 수석 · 보좌관 회의에서 "특권층의 불법 행위와 부실 수사에 대한 국민 분노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총장"으로 지목된 윤 총경은 2017년 문재인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에서도 일한 경력이 있다.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도 이 사태에 책임이 있다.

역사적으로도 민주당 정부는 결코 부패의 예외가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민주당 정치인들은 한국당 뺨치는 부패를 드러냈다.

버닝썬 게이트는 꼬리 자르기와 봐주기 수사로 끝나선 안 된다. 철저하게 수사해서 고위급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강간 문화'와 '남성 카르텔'론의 난점

최미진

버닝썬 사태는 부패가 일상인 자본주의 권력층의 속살을 드러낸 사건이다. 따라서 우리가 규탄해야 할 "카르텔"은 바로 기업주와 부유층 손님, 범죄조직이 연루된 각종 범죄를 눈감아 준 경찰과 검찰, 정치인 등 권력자들의 부패 고리다.

그런데 여성운동 내에서는 (검경 유착을 규탄하면서도) 이 사건의 본질을 "한국사회에 만연한 강간 문화"와 "남성 카르텔"로 보는 주장들이 많다. 좌파 노동단체 일각에서마저 별 문제의식 없이 이런 견해를 수용한다.

페미니즘 일각에서는 이 사건을 '남성 연대의 문제'가 아닌 '권력층 문제'로 보는 접근법 자체를 비판하기도 한다. 이는 오롯이 (자본주의 체제와의 연관성 속에서가 아닌) 성별의 문제로만 볼 때 여성 차별의 **독자적** 중요성이 강조된다는 급진 페미니즘의 접근법을 나타낸 것이다.

여성을 몰래 약물로 기절시켜 VIP 손님 유치에 이용한 것은 피가 거꾸로 솟는 일이다. 하지만 이는 남성 일반이 저지르는 범죄가 아니다. 남성의 극소수가 저지르는 범죄다. 특히 버닝썬 같은 강남의 고급 클럽에서 든든한 경찰 "빽"이 있는 자들이 저지른 짓을 남성 전체로 확장시키는 것은 비약이다.

성범죄를 묵인 · 방조한 검찰과 경찰은 노동계급을 억누르는 국가 권력의 일원인 반면, 노동계급 남성들은 이런 권력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남성 카르텔", "남성 연대"라는 말로 모든 남성을 한통속으로 취급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일각에선 '정준영 동영상'이 검색어로 올라오거나, 일부 남성 카톡방에 불법촬영물이나 여성 몸매 품평 등이 올라오는 일을 '강간 문화'론의 근거로 삼기도 한다. 이런 문화가 "사회에 만연하"고 버닝썬 사태는 그 일환일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도 남성 일반을 "공범"으로 싸잡아 매도할 수는 없다. 훨씬 많은 남성들은 이에 비판적이다. 이런 일이 종종 폭로되는 것도 그 카톡방에 속한 남성의 양심 고백 때문인 경우가 많다.

일부 남성 개개인의 성차별적 언행과 국가권력이 유착된 버닝썬 사태를 인과관계로 곧장 연결시키는 것도 비약이다.

무엇보다 '강간 문화'론은 여성 차별의 근원과 해결책을 찾기 어렵게 한다.

남성이 여성을 일상적으로 지배하고 이것이 성폭력과 여성 차별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급진 페미니즘의 전제다. 가부장제나 '남성 권력' 등으로 표현되던 것이 최근에는 '여성 혐오', '강간 문화'로 용어가 추가된 셈이다.

하지만 이는 여성 차별의 물질적 근원을 설명하지는 못하기에, 결국 그 원인을 남성의 생물학적 본성 탓으로 돌리게 된다. 그러나 《젠더, 만들어진 성》의 지은이 코델리아 파인은 이런 생물학적 성차론이 과학적 근거가 없음을 밝혔다.

매도

여성 차별의 근원은 남성 개개인들에게 내재된 여성혐오 본성이 아니다. 여성 차별은 명백히 그 물질적 토대가 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현재와 미래의 노동자를 재생산하는 일의 부담을 개별 노동계급 가족(특히 여성들)에게 떠넘긴다. 지배계급은 여기서 막대한 이득을 얻는다.

여성 차별은 지배계급이 노동계급을 젠더로 이간시키는 데도 매우 유용하다.

이런 점들이 자본주의에서 체계적으로 여성 차별이 유지 · 강화되는 핵심 이유다.

여성 차별의 근원을 남성 일반에서 찾으면 차별을 체계적으로 양산하는 자본주의 체제와 그로부터 이득을 얻는 진정한 수혜자들이 아니라 노동계급 남성 개개인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게 된다. 그리되면 여성운동은 노동계급의 투쟁과 분리된다.

또한 남성을 싸잡아 매도하면 도덕주의적 태도가 득세해 여성운동의 내향화 · 파편화를 부추기게 된다.

성폭력의 근원을 생물학적 본성에서 찾게 되면 전망이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 "남자들은 원래 그래"라고 전제하면, 여성운동은 해 봤자 소용없거나, 남자들이 자기 본성을 거슬러 깨우치길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하지만 남성에게 차별 의식이 유전자화돼 있다면, 이게 가능할까?)

이런 주장과는 달리, 여성과 남성은 여성 차별에 맞서 함께 싸울 수 있고, 특히 노동계급의 경우 그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 나아가 노동계급 가족에게 노동력 재생산 부담을 전가하는 체제를 전복할 잠재력도 있다. 노동운동의 역사는 함께 싸우는 과정에서 성의식이 발전한다는 것을 보여 줬다.

자본주의 체제와 그 수혜자들인 지배계급에 도전하는 전략을 발전시킬 때만 여성해방이라는 전망도 실현 가능하다. 이를 위해 좌파와 노동운동 투사들은 여성 차별에 맞서 남녀 노동계급의 단결된 투쟁을 구축하려 애써야 한다. 그러려면 모든 성차별에 단호히 반대하면서도 "강간문화"론의 위험성과 비효과성을 이해하고, 대안적 이론과 전략을 발전시켜야 한다.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선거제 개혁 논란
연동형 비례제는 진보에 좋은 것이지만, 정개특위 안은 크게 미흡하다

★ **대기 오염에 관한 더럽고도 치명적인 진실**

★ 프랑스
군대 투입해 노란 조끼 운동 탄압하다

★ 영국
기업주들의 시스템을 고장 낸 브렉시트 협상 2년

★ 서평
《마르크스의 마지막 투쟁 — 1881~1883년의 지적 여정》

★ **중국 정부는 구속한 노동자·학생 석방하라**

노동자 연대 wspaper.org
Workers' Solidarity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을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 5만 원, 2년 10만 원
신청 : 02-777-2792, wspaper.org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인터뷰 | 박흥수 철도노조 철도정책연구팀장

"수서고속철도(SR) 분리 고착화는 박근혜 민영화 정책이 계속되는 것"

최근 국토부는 강릉 KTX 탈선 등 열차 사고를 빌미로 철도공사(코레일)의 시설유지보수분야 분리, 관제권 박탈 등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SR 분리에 이어 철도 민영화로 나아가는 조처들이다. 이에 철도노조를 비롯한 제 시민·사회·노동 단체들은 4월 10일 '돈보다 안전, 민영화 안돼' 철도하나로 범국민운동본부를 출범할 예정이다. 본지는 **박흥수 철도노조 철도정책연구팀장**(사진)을 만나 철도 민영화를 둘러싸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눴다. 박흥수 팀장은 《철도의 눈물》, 《달리는 기차에서 본 세계》, 《시베리아 시간여행》(모두 후마니타스 출판)의 저자이기도 하다.

김미아 찍음

최근 철도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죠. 그간 철도 기본설계도가 한 20여 년 동안 민영화 프로세스를 전제로 한 거였고, 그 과정에서 [시설(시설공단)과 운영(철도공사)의] 상하분리 정책, SR 출범이 진행됐습니다.

SR은 이명박 정권 때 처음에 민간 경쟁체제로 만들려 했다가 문제가 되니까 박근혜 정권 때 '민영화는 아니다' 하며 주식을 발행하는 주식회사로 출범했어요. 당시 주식은 언제든 매각 가능해지면 민영화로 가기 때문에 이를 막을 방안 마련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현재 사학연금,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이른바 국토부가 말하는 공적 지분이 들어와 주식이 분할된 상태입니다. SR은 코레일이 대주주인 자회사라지만 코레일과 SR은 형식적인 관계이고 SR은 전적으로 국토부 정책에 의해 존재하는 기업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성 강화를 말했고, 철도[부문]에서는 이것이 SR과 코레일의 통합이니까 그렇게 될 줄 알았죠. 장관도 정부도, 신임 사장도 통합 중요성을 강조했고 이렇게 진행될 듯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관료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온 철도 정책을 부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고, 더 나아가 본심은 과거 정책이 잘못이라고 생각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위에서 시키니까 하긴 하지만 내부에서 김을 빼는 작업, 은근한 사보타주(고의적 방해)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말한 경쟁 효과는 허구였어요. 지방에 있는 승객은 수서역으로 직통할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고, 요금도 낮아졌다고 하는데 코레일은 낮아지지 않아 요금 혜택도 일부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노정되고 있는데 고착화하려 합니다. 이를 더 두고 보자는 것 자체가 현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국토부의 의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도 박근혜의 철도산업기본계획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주회사 코레일을 만들고 자회사로 분리하는 기본 설계도는 고치지 않고 있어요. SR 통합은 통합대로 막고요.

이런 현실을 볼 때 현 정권이 그간 추진했던 사회공공성에 반하는 정책이 구현되고 있는데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 부임하는 장관은 과거에 철도 정책관도 역임하면서 SR 분리 정책에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철도 개혁의 길은 만만치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의 철도 민영화 정책(철도산업구조개편 방안)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명박근혜의 철도산업구조개편 방안은 중단된 적이 없어요. 계속 그 흐름 속에 있었고, 문재인 정부는 이 흐름을 바꿔 내야 하는 거예요. 2020년 이후 계획을 세울 준비를 해야 하는데, 과거 정책이 변화되지 않은 거죠. 그것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가 코레일과 SR의 통합이에요. 이 통합이 추진되면 여러 정책이 수정돼야 해요. 그런데 SR 통합 의지도 없는 상황이므로 기존 정책이 진행되는 것이죠. SR이 알박기처럼 존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만약 민주당 정권이 계속되면 당장 주식 매각은 쉽지 않겠지만, 경제가 어려워지고 경쟁체제 효율성, 민영화를 주장하는 훨씬 시장주의적 정권이 들어서면 그때는 가속될 것입니다.

SR 분리는 어떤 문제를 낳고 있나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코레일을 구조적인 부실 기업으로 계속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알짜배기 노선의 수익을 SR이 가져가면서 결국은 그것이 코레일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막게 되는 거죠. 물류나 지방선 적자에 대한 교차보조를 코레일이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이에 따른 구조조정은 압박을 더 받을 것입니다. 정부는 PSO(공익서비스의무) 보상도 줄이고 있습니다. 결국 짜도 짜도 안 짜지면 죽음의 외주화 같은 것들을 확대하는 문제가 생겨날 것입니다.

SR을 통합하면 그 흑자로 지방선 환경을 개선하거나 낙후된 시설 보완하는 일에 적극 투자할 수 있어요. 현 정부가 말하는 청년 일자리도 늘리고 공기업의 책임과 역할에 부흥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을 하지 못하고 손발이 묶이는 거죠.

지금도 적자 증가를 이유로 지방선 운행 횟수가 축소됐고 앞으로도 더 심해질 거예요. 통합하면 코레일 요금도 인하할 수 있는데 요금 인하도 못하고, 안전시설 투자도 예산이 빠듯하니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SR은 배당금으로 수익이 나가는데, 통합체제라면 그 돈을 공공성 강화에 사용할 수 있었을 겁니다.

노무현 정부 때 시설과 운영을 분리해 민영화의 큰 틀을 만들었지만 시설 유지보수분야는 분리를 못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안전을 위해 이 분야를 코레일에서 떼어 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코미디죠. 왜냐면 상하분리 당시 철도시설공단을 출범시키고 건설과 유지보수를 다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시설유지보수를 떼지 못한 것은 안전 때문이에요. 시설에 보수 문제가 생길 때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것은 운영자 기관이거든요. 기관사가 매일 다니는 선로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충격이나 진동이 느껴지면 바로 시설반에 연락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선로 공사를 하더라도 어느 시간대에 열차운행을 중단한다든지, 운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분리하면 진짜 위험하다고 해서 분리를 못한 건데, 이제는 안전 때문에 분리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국토부는 분리가 제대로 안 된 것이 문제라고 보는 건데 사실 안전 문제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강릉선 사고 이후 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사실 사고 원인과는 다른 논리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강릉 사고의 진정한 원인은 시설공단의 시공 문제였어요. 정부가 유지보수분야를 시설공단으로 넘기면 시설공단은 결국 관리 기능만 빼고는 외주화 유혹이나 압박을 많이 받게 될 겁니다.

국토부가 코레일한테서 관제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 커지는 것 같은데요.

관제권 회수도 계속 추진해 오던 것입니다.

관제권을 철도공사가 수행해서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국토부는 철도공사의 기능을 분리시키고 관제를 독립시켜 열차 배분권을 강력하게 조절하게 되면 경쟁체제 활성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관제권을 회수하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 회사가 경쟁할 때 공정성이 제기되니까 관제권 분리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철도공사는 단순 운영기관으로 전락해 국책 공기업에서 위상과 역할이 축소되는 것이죠.

관제는 국토부가 책임이고 철도공사에 위탁을 준 것이므로 국토부가 맘먹으면 수탁자가 바꾸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관제권 회수는 SR 분리 때 아주 많이 나왔다가 쑥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있어요. 지금 관제권이 강조되는 것은 사실 SR과 코레일 통합은 없다는 의미에요.

인터뷰·정리 이정원

용어설명

철도 관제권
열차 운행과 관련한 각종 지시와 통제를 담당하는 업무

함께 참가합시다!

대륙철도 시대, 공공성 강화!
'돈보다 안전, 민영화 안돼!' 철도하나로범국민운동본부 출범식
일시: 4월 10일(수) 오후 1시
장소: 서울역 광장

마르크스주의 역사가 **도니 글룩스타인** 초청 토론회
파시즘, 어제와 오늘
— 역사 속 나치와 오늘의 재등장
4월 5일(금) 오후 7시 30분 | 서울 충무아트센터 1층 컨벤션홀 (2·6호선 신당역 9번 출구에서 100미터)
주최 〈노동자 연대〉 wspaper.org
참가비 7000원 (학생 4000원) ※ 전문통역사와 장소 대여를 위한 비용입니다.
문의 02-2271-2395 | 010-4909-2026 (문자 가능) | mail@workerssolidarity.org

도니 글룩스타인은 영국사회주의노동자당(SWP) 당원이고, 에든버러대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 SWP의 창립자 토니 클리프의 아들이기도 한 그는 클리프와 함께 《영국 노동당의 역사》(책갈피), 《마르크스주의와 노동조합 투쟁》(책갈피)을 썼다. 그 밖의 저서로 《서구의 소비에트》(풀무질), 《The Nazis, Capitalism and the Working Class》(1999), 《A People's History of the Second World War: Resistance Versus Empire》(2012, 국역 근간) 등이 있다. 노동자 민주주의와 저항에 관한 역사 논문도 많이 썼다.

통역자 조응주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을 나와 동시통역사이자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